

“일본은 아시아해방 지도국”

〈한겨레〉가 9일 입수한 일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 사본은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들을 통해 일부 공개된 중학교 공민교과서와 쌍을 이룬다. 역시 ‘새로운...회’가 편집해 문부성에 검정 신청한 공민교과서는 ‘핵무기 근절이 과연 절대적인 정의인가?’라며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전쟁과 군대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개정도 주장했다.

이 역사교과서의 최대 특징은 전범국 일본을 정의의 사도로 뒤바꿔 놓음으로써 군국 일본이 교전국이던 연합군을 악의 화신으로 선전한 ‘영미귀족’식 역사관을 고스란히 되살리면서 일본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 검정통과 앞둔 일 교과서 주요내용

2차대전 전범재판 강력 비난 군위안부·창씨개명 비켜가기

특히 일본군이 남방침략을 결행하면서 식민종족이던 구미 여러 나라로부터 동남아 지역을 빼앗기 위해 동원한 인도·미얀마·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의 일부 현지민들을 독자적 민족해방전사로 묘사하면서 스스로를 그 ‘성전의 지원자, 지도자’로 부각시킨 부분은 역사왜곡의 압권이다. “인도의 법률가 바라바이 데사이는 인도 독립은 일본 덕택에 30년은 앞당겨

졌다고 말했다”는 식의 야사를 정사의 중심에 앉히는 일도 되풀이된다.

교과서는 또 2차세계대전 당시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 등 전범자들을 교수형에 처한 1946년 일본 도쿄 극동국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일본의 전범의식은 점령군사령부가 의도적으로 주입한 ‘선전기획’ 활동의 결과이며 일본군의 중국 난징 대학살도 사실여부가 의문스런 ‘사건’

이라고 주장한다. 식민지 조선 기술 부분은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징용(식민지인대만·조선에도 적용됐다)도 이뤄졌다”는 표현이 유일하다.

집필자들은 “일본군은 애초 점령지역을 군정 아래 두고 독립운동을 단속했기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느낀 아시아 민중도 많았다”는 식의 문장도 중간중간에 끼워넣었다.

이런 식의 짧은 문장 뒤에는 반드시 “그러나”로 시작되는 장황한 자기정당화 기술과, “전쟁이란 원래 그런거야”라는 점과 “일본은 그래도 훨씬 선량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설성 글이 덧붙는다.

피해자로서 일본을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가며 누누이 부각시키고 “미군 장병들은 이(가미카제 특공대)를 자

살공격이라며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꼈으며 나중에 존경의 염까지 지니게 됐다”며 강인한 일본정신을 강조하기도 한다.

일본 청소년들이 전후 역사에 대해 거의 모르는데다 주변국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점을 생각하면 이 교과서가 그대로 채택될 경우 역사왜곡의 상호상승작용과 이로 인한 악순환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이런 마찰을 기술적으로 피하기 위해 군대 위안부, 창씨개명, 징병·징용 등 특정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만한 내용은 아예 빼거나 매우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는 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했다.

이들 교과서는 내년 7월 자치체들이 관할 학교 교과서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미 4대 교과서 제작사 등 주요 출판사들은 이 교과서 내용을 의식해 자사가 만든 교과서에서 군대위안부 등의 내용은 자진해서 삭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한 바 있다.

도쿄/한승동 특파원 sdhan@hani.co.kr

■ ‘교과서 왜곡’ 주도세력

학제-정·재계 우파 총망라

후지오카교수등 ‘총대’...언론·종교집단도 가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는 1996년 12월에 도쿄대 후지오카 노부가쓰(57) 교육학부 사회교육과 교수와 니시오 간지(65) 전기통신대학 독문학과 교수,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만화 〈전쟁론〉으로 널리 알려진 고바야시 요시노리(47) 등이 중심이 돼 결성했다.

이들은 일본이 근대 이후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아시아 역사를 끌고온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문화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2차대전 패전, 전후 일본역사

는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들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학사관’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이를 뒤엎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사관 정립을 강조한다. 일본의 아시아 유린을 은헤로 호도하는 억지 때문에 ‘타학사관’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한 군국 일본의 ‘대동아전쟁 긍정사관’은 뒤로 감춘 채 표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대학교수들과 기업 간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에는 집권 자

민당의 지역지지기반인 일본청년회의소, 우파 단체와 교사들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사관연구회, 각 자치체의 특정 검정교과서 채택운동을 벌이고 있는 도쿄교육재흥네트워크, 후소사 등의 출판사와 〈사피오〉 〈산케이신문〉 등의 언론사도 가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막사’라는 광신적 우파 종교 집단의 지원을 받는다. 그 뒤에는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원 200여 명을 헤아리는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버티고 있다. 의원모임은 일본 정부의 아시아 침략 사죄를 앞장서서 반대해왔다.

중심인물인 후지오카(이사)는 91년 걸프전 이후 자유주의사관을 선창해왔고 고바야시(이사대우)는 〈사피오〉에 지금도 ‘신 고마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관을 공격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도쿄/한승동 특파원 sdhan@hani.co.kr



일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검정 신청한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 ‘침략전쟁이란’이라는 제목 아래 태평양전쟁을 미국의 대일 적대정책 때문에 불가피했던 ‘자위전쟁’이라고 정당화하는 내용이 보인다.